

당진시 ‘정원문화지원센터 조성’ 박차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30억 원 확보
삼산산수목원·지방정원 유기적 연계 복합정원문화 조성
산림휴양·관광 벨트 구축·국산 목재 이용 문화 확산

충청남도 당진시가 산림청이 주관한 ‘2025년 정원문화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당진시는 28일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130억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국산목재 목조건축실연사업’을 주제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고대면 옥현리 일원 지방정원 내에 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삼산산수목원’과 ‘지방정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실내 복합정원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센터 외부는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 건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랜드마크형 실내정원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내

부에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정원 △가든샵 △도서관 △체합교육실 등 다채로운 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자연 속에서 휴식·배움·문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고품격 녹색 힐링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정원문화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경제적·환경적 및 사회·문화적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효과로는 삼산산수목원·지방정원·정원문화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중부권 최고의 산림휴양·관광 벨트를 구축해 생활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진시가 '2025년 정원문화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정원문화지원센터 조성'에 활력을 얻게됐다. 정원문화지원센터 조감도. 당진시

환경적 효과로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목재 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사회·문화적 효과로는 시민들에게는 사계절 녹색 복지를 제공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정원 관련 교육 및 체험을 통해 새로운 여가 문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당진시가 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 비전을

정원 문화와 건축에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며 “시민들에게는 특별한 휴식처로 방문객들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진=이진서 기자 ljs@skyedaily.com

홍성군,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최우수’

충남 도내 유일 A등급 획득
치매관리 유공 기관도 선정

치매공공후견 운영·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사업 높은 평가

충청남도 홍성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충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홍성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유공 기관으로도 선정돼 도지사 기관 표창까지 수상하며 '2관왕'의 영광을 안았다. 홍성군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충청남도 치매관리사업 유공 기관으로도 선정돼 도지사 기관 표창까지 수상하며 ‘2관왕’의 영광을 안았다.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치매정책 수행 능력과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등 3개 영역 27개 조사 항목으로 서면·데이터 검증과 현지 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홍성=이진서 기자 ljs@skyedaily.com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군산 미공군 초청

탐방 프로그램 운영... 4월 전주 이어 김제시 방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군산 미 공군기지와 협력해 전북의 문화를 알리고 우호를 증진하는 만남을 가졌다.

28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따르면 군산 미 공군기지 장병 60여 명을 김제시 금산사 일원에 초청해 전북의 매력과 우수한 문화를 알리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는 지난해 5월 미국 공군기지 영내에서 운영한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올해 4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전주 탐방 프로그램’에 이어 진흥원과 군산 미국 공군기지가 함께한 3번째 행사로 미 공군 장병들이 전북의 명소·생활·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미국 공군기지와의 협회 행사인 만큼 단순 문화체험을 넘어 주둔지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양 지역의 우호

증진이라는 공공 외교적 목적도 담고 있다.

미 공군 장병들은 김제 금산사에서 △사찰 문화투어 △연꽃 등 만들기 △108 염주 꿰기 △스님과 의 차담을 체험하며 한국의 정신문화와 전통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수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미 공군 장병들이 전북을 알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전북의 매력을 알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전북자치도의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전북의 매력을 알리는 국제교류·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임재만 기자 AMA911@naver.com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군산 미 공군기지 장병을 금산사 일원에 초청해 전북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영호남 상생 화합의 상징
중앙경찰학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유치
25일 서울시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을 지지하는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여야 초당적 한마음

영·호남 정치인, 남원 설립 지지 기자회견 진행
후보지 100% 국공유지... 건축재정 기조 부합

여당과 야당 그리고 영남과 호남 정치인들이 한뜻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8일 전북자치도 자치경찰행정과에 따르면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 공모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전북 지역 및 영호남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남원시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임원진도 함께해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남원 입지 선정 지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남원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단순한 지역 생존의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북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돼 왔으며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남원시는 인구 8만 명(8월 기준 7만4867명) 선거지 무너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가 지방 소멸 위협의 위기 돌파 기회로 평가받는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들어서면 연간 5000명의 신입 경찰이 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약 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300여 명의 상주 인력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위한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후보지인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100% 국공유지로 토지 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아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와 부합한다. 광주~대구,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KTX-SRT 등 교통 인프라도 구축돼 있으며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5월부터 제2중앙경찰학교 비용·편의 분석 용역을 실시했다. 11,12월 중 2차 평가와 부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2027년 예산 확보, 2028~2029년 기본·실시설계 이후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후보지 최종 결정 시까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임재만 기자 AMA911@naver.com



당진시의회가 다음달 1일까지 7일간 제1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 다음달 1일까지
123회 임시회 36건 의안 처리

충청남도 당진시의회가 다음달 1일까지 7일간 제123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진시의회는 조례안·예산안 등 총 36건의 의안 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시정 현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영훈 의장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교육·복지·교통·환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울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교통·환경·상하수도·배수시설·통신망·응급 의료체계 등 도시 전체 시스템을 점검보완하여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 맞이와 소외된 이웃 돌봄을 당부하며 “모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당진=이진서 기자 ljs@skyedaily.com

대전 특사경, 식당 등 53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6곳 적발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7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위생 취약 업종인 배달음식점 및 PC방 내 음식점 5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배달앱 상위순위 음식점과 학생·청년층 수요가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소 3곳 △영업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3곳이 확인됐다.

실제 단속에서는 A·B업소는 마요소스·데리야끼소스·식빵·소시지 등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냉장·냉동 보관했고, C업체는 자동·패션후르츠·레몬·흑당베이즈 음료를 진열대에 비치하다 적발됐으며, D·E·F 업소는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이와 함께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익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음식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전=이진서 기자 ljs@skyedaily.com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대전시